



##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 작년 '상속세 상위 1%' 199명...1인당 세금 396억원 납부

지난해 상속세 납부자 중 '상위 1%'가 낸 세금이 1인당 396억원에 달했으며, 이들 상위 1%의 증여세 납부액은 3년 연속 증가세가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를 낸 납세자는 1만9천944명이었다. 1만5천760명이었던 2022년과 비교하면 26.5% 늘어난 숫자다.

총상속재산 가액은 51조8천564억원, 결정세액은 12조2천901억원이었으며, 결정 세액을 인원으로 나눈 1인당 결정 세액은 6억원이었다.

1인당 결정 상속세액은 2019년 3억원을 시작으로 2020년(4억원), 2021년(4억원), 2022년(12억원)으로 매년 증가·보합하다 지난해 하락 전환했다. 상속재산 가액 상위 1%인 199명이 납부한 세액은 7조8천835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결정 세액은 396억원이었다. 167억원이었던 2021년보다는 늘었지만, 1천6억원이었던 2022년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지난해 증여세를 낸 납세자는 20만8천508명이었다. 총 증여재산 가액은 35조1천903억원, 결정세액은 6조9천989억원이었다. 1인당 납부한 증여세는 3천만원가량이었다. 2021년, 2022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증여재산 가액 기준 상위 1%인 2천85명이 납부한 세금은 3조759억원, 1인당 결정세액은 15억원이었다. 2021년 12억원, 2022년 14억원에 이어 3년 연속 상승세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 비정기 세무조사 가동... 연초 세무조사 축소기조 어렵다

국세청이 올해 연간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1만3973건) 수준으로 유지한다. 대내외 경제여건, 인력 상황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간 건수를 유연하게 운영한다.

단, 인력에 한계가 있고, 올해 남은 시간이 석 달 남짓 정도밖에 안 돼 세무조사가 늘어나더라도 1만4000건 안팎에서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영세납세자는 간편조사에서도 원칙적으로 제외해 부담을 완화하고, 간편조사 건수 축소를 확보한 자원을 거둘

수 있는 곳으로 돌린다.

필요한 경우 비정기 세무조사를 선정하고, 장부 일시보관을 실시하는 등 악의적 탈세에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한다.

유튜버 광고·후원 수익 누락 등 온라인 플랫폼 탈세, 해외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변칙 발행·거래 등 신종 분야 감증을 강화한다.

미등록 결제대행업체(PG) 등 과세인프라 우회거래, 기확부동산 등 이상거래, 상가 거래 시 영업권(권리금) 무신고, 지방세 대납한 법무사의 캐시백 수입 누락 등 관행적 신고 누락을 집중 점검한다.

다국적기업 등의 자료제출 거부·지연 등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도입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중요한 자료)을 명확화한다. 포상금 예산 자체는 늘렸는데, 대대적인 세수팽창으로 정부 내 현금이 없어서 포상금 지급이 쉽지 않다.

온라인 탈세제보자에게 처리상황·담당자 등 실시간 제공하고, 모바일 접수 시 동영상·문서 첨부 기능을 추가한다.

디지털 경제 확산, 탈세 지능화에 대응 가능한 조사기법 및 데이터 수집·분석시스템 고도화로 과세사각지대를 축소한다.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특정 지갑의 거래내역을 조회하고 복사용지의 작성시기 감정법, 잉크 염료성분 분석법 등 포렌식 기술을 강화한다.

외환분석시스템을 개선, 외환송금·수출입통관 등 빅데이터 분석으로 거래흐름을 시각화한다.

고액 상속세납에 대해선 고가 외제차 리스 보증금, 허위 부동산 근저당, 산업재산권·특허권, 해외재산 내역, 가상자산 거래이력 등 외부 과세자료를 연계 분석한다.

채납자 생활실태 확인, 주변인·이해관계자 탐문, 주소지·사업장 수색 등 현장추적 조사 강도를 높이고,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채납처분 면탈법 고발 등에 적극 나선다.

채납자 유형분류, 차량압류·해제 전자촉탁 등 업무지원 시스템을 확충하고, 법원공탁금채권(법원), 전기·수도·가스(국토부), 지역주택임주권(한국부동산원) 등 다양한 재산수집자료를 전산에 구축한다.